

코로나 불황 속 대출 절박한데... 서민 두번 울리는 대출사기 기승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사업실패, 카드 연체, 실직 등을 경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영업자·청년 등 서민들이 낮은 신용도 때문에 은행 등 제도 금융권에서 '잔밥 신세'가 되면서다.

연 30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쟁기고 폭행·협박을 일삼는가 하면,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할인 매입한 뒤 대포폰으로 쓰는 '내구제대출', 대출해줄 것처럼 속여 보증보험료나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 등이 대표적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낼 돈이 절실한 '없는 사람들'은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가늠하지 않고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훨씬 이자가 비싼 2금융권을 전전하다 사금융 시장까지 찾아다니는 '대출의 악순환' 상태에 내몰리는 실정이다.

◇연환산 이자율이 무려 3000%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오연수 부장판사는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이들은 무등록 대부업자와 공모, 인터넷 등에 대부업 광고를 올리고 찾아온 서민들에게 '30만원을 빌리면 일주일 뒤 50만원을 상환하고 돈을 갚는 날 12시까지 상환하지 못하면 3시간마다 10만원의 추가이자 발생하는 조건'으로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지인 등을 협박해 원금과 연체 이자 및 벌금으로 2019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400여 차례에 걸쳐 7억2800여만원을 빌려주는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채무자들에게 15명 내외의 친·인척과 지인 연락처·직장명 등을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받은 뒤 연체할 경우 이들에게 협박해 받아냈다. 이들이 받은 연체이자율은 법정최고금리 연25%(지난해 7월부터 20%)의 100배가 넘는 3128%~3476%에 달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법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 인생만 아니라

자영업자·서민·청년 등 피해 속출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크게 늘어난 3000% 폭리에 폭행·협박까지 대포폰·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도

네 가족들 인생도 망한다', '네 직장 X같이 만들어 줄게' 등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지난 2020년 접수받은 신고·상담건도 12만8538건으로, 전년도(11만5622건)보다 11.2% 늘었다. 특히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발생과 관련한 신고·상담 사례는 6만208건으로, 전년도(3만7922건)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고금리 초과(1219건) 및 중개수수료 위반(202건) 피해 신고·상담도 대폭 증가했다.

◇휴대전화 강, 범죄에 연루되기도=최신형 휴대폰을 개통시 현금 지급이라는 광고만 믿고 이용했다가 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나를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의 '내구제대출'로, 최신형 휴대폰을 개통해서 유심칩과 함께 남겨주면 현금을 준다는 말만 믿고 돈을 받았는데, 이후 휴대폰 요금 청구뿐 아니라, 국제전화요금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됐다며 경찰 조사까지 받는 일까지 경험하는 젊은 청년들도 적지 않다.

휴대전화를 받은 대출업자는 소액결제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품권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로 구매해 휴대전화 하나당 한달 최고액인 100만원 가량의 소액결제가 진행된다. 대출업자는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넘긴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4)씨 등 9명에 대해 각각 징역 2~4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광주시 북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면 1대당 50~120만원을 주기로 하고 넘겨받은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월 5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가 하면,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수백만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자금을 빌려 가로채 혐의를 받았다. 내구제 대출의 경우 불법임에도 정수기, 스타일러, 라텍스침대, 안마의자 같은 고가 렌탈 제품을 이용한 대출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출사기도 여전 =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형태의 보이스피싱도 여전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진만)는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료, 대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채 C(46)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2년~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면서 "피해금액 규모,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유지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 정부기관, 자가검사키트 공급업체 등을 사칭하며 자가검사키트 공급, 구매 등을 사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등의 보이스피싱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울 마포구 대흥동 경총회관 앞에서 여천NCC 폭발사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중대재해 대책 수립을 촉구하며 여의도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천NCC, 광주·전남 첫 중대재해법 적용

고용부, 공동대표 2명 입건

지난 2월 11일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폭발사고와 관련, 고용노동부가 광주·전남 첫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키로 하고 혐의 입건에 주력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인 삼포산업 토석채취현장 붕괴사고와 수사 속도를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3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여천NCC 공동대표 2명을 전과 보전 확보 의무 불이행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여천NCC는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각 지분을 50%씩 소유한 합작법인으로 각각

의 회사 관계자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검토 중으로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내 검찰로 사건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여천NCC 중간 관리자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입건하고, 3일 3차 합동 현장정밀감식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유공자들도 모르는 국민의힘 특보 임명장

"동의한 적 없는데 명의 도용했다"... 공동행동 나서기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 측이 일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특보 임명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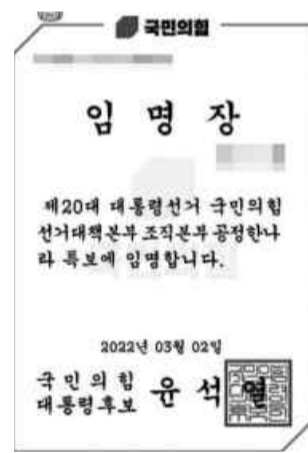
임명장을 받은 5·18유공자들은 '특보 임명에 동의도 해준 적이 없고 명의가 도용되는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3일 (사)5·18민주화운동 구속부상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오후 6시경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수십여명의 휴대전화로 국민의힘 특보 임명장을 보냈다.

임명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공경한나라 특보에 임명합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임명장을 받은 유공자들은 특보 임명에 동의한 적도, 개인정보를 알려준 적도 없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구속부상자회측은 임명장이 전달된 전화번호로 항의했다가 '임명장 일련번호를 알려주면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며 경위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일부 회원들 입장을 수렴, 대책을 논의 중이다.



조규연 구속부상자회장은 "수십명의 회원들에게 동시에 일련번호가 나란히 찍힌 임명장이 보내졌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중앙당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한 사유를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감염 예방 이유 교육생 외출·외박 금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따르면 인권위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이유로 교육생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한 A교육원에게 외출·외박에 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신입 교육생 교육과정 중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제한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A교육원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교육원측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두 달 넘게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금

지고 있었다. 인권위는 또 A교육원 학생생활규칙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규칙상으로는 피진정인이 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과 교육생이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교육생들이 교육원 조치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별로 순차적인 외출·외박을 허용하거나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을 대체할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교육생 동의도 받지 않고 장기간 모든 교육생의 외출·외박을 전면 금지한 것은 교육생의 일방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경매물건 강력 추천

- 사건번호-2021타경 6943
- 소재지-광주 북구 신안동
- 대지-176평, 상업지역
- 경매일자-2022년 3월 10일

문의. 010-3605-5000